

친족이 더 무서워...범죄 늘고 용서도 안한다

가정폭력에 절도·살인사건까지...광주 친족간 범죄 5년간 4592건이나 '친족상도례' 거부하고 고소·고발 등 처벌 요구하는 가족도 부쩍 늘어

광주·전남에서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간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친족간 경제범죄가 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가족간의 용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이 범죄 대상이 되는 사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장은 7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A씨를 특수준속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B씨가 1억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는 노인 일자로 생계를 유지하던 C(71)씨는 아내가 자신의 수입을 모두 써버리고 10여년 동안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몰래 중도 해약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해지금을 사용하자 불만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친족간의 경제적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친족간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가정폭력)는 총 4592건이 발생했다. 매년 1000건에 달하는 친족간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443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강간·강제추행, 절도, 살인이 뒤를 이었다. 이 중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친족간 절도도 2023년 14건으로 부쩍 늘었다. 전남에서도 최근 5년간 총 83건의 친족간 절도 범죄 수사가 이어졌다. 2019년 13건, 2016년 16건, 2021년 18건, 2022년 21건, 2023년 15건으로 친족의 절도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절도죄는 수사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친족간 절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달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정 내 불화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퇴색하는 징후로 본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과거에 정립된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경제범죄에서 시작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친족상도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등 친족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도 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경찰들은 가족이라도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종문 광주남부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옛날에는 가족끼리 용서하고 넘어갔던 일도 최근 몇 년 새 꼭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며 "특히 가족은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우위니아 전·현직 임원 4명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

광주지검이 박영우 대우위니아 그룹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7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대우위니아그룹 박영우(69)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계열사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역 계열사 법인을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앞서 박 회장 다른 계열사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구속기소해 재판에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1년 6개월간 임금을 못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 "대검찰청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복구를 위한 업무개선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YMCA와 광주YWCA 등이 주축이 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접수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하라"

광주교육시민연대 촉구

광주YMCA와 광주YWCA 등이 주축이 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에 지난달 말 접수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5월 1일자 광주일보 7면)를 위한 조례안 각하를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은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시의회에도 기어코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 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돼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돼 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이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됐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다. 사법부도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출된 1만366명의 청구인 명부를 공표, 오는 13일까지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각 자치구에서 한달여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주소 불일치, 서명 무효 여부 등 청구인 명부를 검증한다. 검증 절차 이후에도 청구 요건(8034명)을 충족한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 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건설, 중도금 대출이자 미납입 사과

"분양 보증서 발급...문제 없어" 단독방 운영 소통 등 대책 마련

법인회생 신청을 한 한국건설(5월 7일자 광주일보 6면)이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건설은 홈페이지에 '아텔리움 고객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팝업 공지를 게시했다. 한국건설은 '최근 저희 회사가 시공한 사업과 관련해 고객님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서를 발

급했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사항에 대한 소통을 위해 계약자 공식단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장, 분양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단독방은 홈페이지에서 현장에 맞는 단독방을 선택한 뒤 안내문자에 기재된 코드번호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2820억원에 달하는 부채 변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철거 작업자 사망'...공사 의뢰 목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개별적으로 부탁해 철거작업을 하다 숨진 경우 부탁한 사람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1심에서는 철거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불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여·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0분께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폐건물을 일부 철거하던 B(68)씨가 벽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철거 후 정리 작업을 부탁한 사실은 있어도 철거 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날 B씨와 통화해 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A씨가 타 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철거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준비를 제공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수행하라고 의뢰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 사실만으로 계약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해체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철거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A씨와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단지 정리 작업 부탁만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피해자와 작업에 대한 통화가 없었다고 사고 전날 통화 내용을 토대로 사고발생일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